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리스크 완충 장치 도입 서둘러야”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목소리

전남도 오늘 농민단체 등 참석 농업정책회의 의견 수렴 나서  
농업 전문가들 “쌀 등 필수 농산물 ‘예외’ 적용할 방안 찾아야”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의 가격 차이가 크고 식량 안보에 절대적인 쌀 등 필수 농산물의 경우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는 데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위한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가 민간 협의회 구성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농도(農道) 전남’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오는 3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농민단체·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정혁신위원회 농업정책분과회의’를 열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저가의 수입산 농산물로 인한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같은 날 농업 전남지역본부에서 전국 생산량의 23.1%(7만104 t·2017년 기준)인 마늘, 45.0%(51만4896 t·)에 달하는 양파 생산 비중이 큰 해

남·무안·함평·신안 지역 담당자들과 생산 농가들이 참여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관련 간담회’를 열고 농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 전남 농업에 생길 피해와 농민들 우려를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다음달 열리는 ‘전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되면 특별품목으로 지정, 외국산 수입할때 513%의 관세를 매기며 보호해왔지만 장기적으로 최대 154%까지 낮아질 지도 모른다는 게 농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2005년부터 여태껏 53개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오면서 품목별관세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WTO 협상에서 마지막 버팀목으로 인식됐던 개도국 지위까지 내려놓게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WTO 출범과 FTA 시대 개막 이후 농산물 총수입은 2.1배 늘었고 농산물 총생산은 21% 증가한 반면, 농업 실질 소득은 40%가 줄었다는 점 등으로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트라우마가 농민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 분석이다.

농업정책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 이경환 이사장은 “개도국 졸업과 함께 농업의 가격 리스크 완충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경기지역 15개 농민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의 소득 안정을 어렵게 하는 농산물 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전남도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FTA와 WTO 등을 통해 형성된 농업인들의 ‘가격 리스크 트라우마’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WTO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계기로 전남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업에 생길 피해, 농민 걱정을 감안해 앞으로 민관협업체 같은 것을 함께 구성해 우리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차체에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될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며 “농민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체의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역·기초의회 잇단 일탈 행위 차단 민주광주시당 의원 86명 참석 워크숍

“북구의원 4명 윤리심판원 연기  
정족수 안돼...징계 미룬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이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잇단 구설수와 관련, 가을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전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허위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북구의회 민주당 구의원 4명에 대한 윤리심판원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일부 광역·기초의원 일탈이 잦아 해마다 치렀던 가을 체육대회를 올해는 취소하고, 오는 16일 광역·기초의원 86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한 뒤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일 예정됐던 민주당 광주시당의 가을 체육대회는 취소됐다.

반면, 28일 예정됐던 북구의회 구의원들의 윤리심판원은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윤리심판원은 물의를 빚은 정치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날 윤리심판원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연기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징계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경고 등 징계 결정은 출석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을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재적과반수 찬성해야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서 “이날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정족수가 되지 않아 연기했을 뿐 징계를 미룬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모두 9명이며, 북구지역에서 활동하는 1명의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번 윤리심판원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구의회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달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정작 시의회는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허위 출장 논란을 빚었다. 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는 내년부터 부의장 2명을 7급 직원이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난이 일자 철회했다.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시당의 자문과 심사를 받으라는 규칙을 어기고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서구의회의 윤리심판원은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윤리심판원은 물의를 빚은 정치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날 윤리심판원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연기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징계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의회의 최근 지방의회 연수가 논란이 일자 자진 포기했다. 북구의회는 5급 상당 시간 선택 임기제 합격자가 ‘허위 경력’ 논란이 일자 채용을 철회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경고 등 징계 결정은 출석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을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재적과반수 찬성해야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서 “이날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정족수가 되지 않아 연기했을 뿐 징계를 미룬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모두 9명이며, 북구지역에서 활동하는 1명의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번 윤리심판원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구의회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달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정작 시의회는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허위 출장 논란을 빚었다. 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는 내년부터 부의장 2명을 7급 직원이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난이 일자 철회했다.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시당의 자문과 심사를 받으라는 규칙을 어기고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서구의회의 윤리심판원은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윤리심판원은 물의를 빚은 정치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날 윤리심판원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연기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징계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경고 등 징계 결정은 출석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을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재적과반수 찬성해야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서 “이날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정족수가 되지 않아 연기했을 뿐 징계를 미룬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모두 9명이며, 북구지역에서 활동하는 1명의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번 윤리심판원에 참여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인공지능은 인류 동반자... 연내 AI 국가전략 제시”

네이버 ‘데뷰’ 행사 기조연설  
내달 아세안·아펙 회의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라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해 사회혁신 동력이 되게 함께 노력하자”며 “일자리 변화와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언급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이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新)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5G 등과 함께 AI 분야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전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인류를 이끌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 안전, 고도

화되는 범죄 예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천억원을 배정했다”며 “미래를 좌우할 스타트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달 3~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 13~19일 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다음달 25~27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도 주최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1월의 거의 절반을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데 보낸다. 문 대통령은 동시다발 정상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들 다자 정상 외교 계기에 수출규제 문제로 냉각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www.gaok.or.kr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입니다.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앞당깁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